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구조적 소비 부진의 한일 비교와 시사점

# 목 차

---

## ■ 구조적 소비 부진의 한일 비교와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국내 소비 부진 지속 .....	1
2. 한일 비교 .....	2
3. 시사점 .....	11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한 상 완 대 표 이 사 (2072-6230, swhan@hri.co.kr)

경제연구본부       :   이 부 형 수 석 연 구 위 원 (2072-6306, leebuh@hri.co.kr)

### □ 구조적 소비 부진의 한일 비교와 시사점

#### ■ 국내 소비 부진 지속

최근 한국 경제는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일본이 경험한 바와 같이 구조적인 소비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1960년대 6.6%p에서 2000년대에는 0%대로 지속 악화되면서 경제 성장률도 1% 전후 수준의 저성장세가 이어졌다. 한국도 최근 수년간 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 후반대로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도 3%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 ■ 한일 비교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통화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 창출력 약화, 소득 증가세 둔화 및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로 소비가 침체되는 가운데 인구구조마저 악화되면서 구조적 소비 부진에 따른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가치 상승 속 해외직접투자 가속)** 일본은 197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해외직접투자가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엔화가 평가절상되면서 가속화, 산업공동화가 진행되었다. 엔화는 변동환율제가 시행된 1971년 이후에도 저평가가 이어지다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이듬해 168엔/달러로 엔/달러 환율이 급락,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100엔/달러대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통화가치가 상승하면서 플라자합의 이전인 1971~1985년까지 연평균 31.8%씩 빠르게 증가하던 해외직접투자가 버블 절정기인 1986~1989년에는 연간 67.5%씩 증가하는 등 투자의 해외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2011년 대비 2014년 4.6% 밖에 상승하지 않았으나, 실질실효환율은 동기간 약 16.4% 상승하는 등 원화 강세가 이어졌다.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중반까지 누적 약 35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연평균 360억 달러 이상 수준에 달한다.

**(국내 투자 둔화 속 고용 부진)** 투자의 해외 유출 가속화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면서 장기 고용 부진 현상을 유발하였다. 일본의 민간설비투자는 1970년대 후반의 금리인하로 1991년까지 연평균 8.4% 증가했으나, 이후 마이너스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장기 부진이 이어졌다. 민간주택투자도 1980년대 중반 이후 금리 인하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1980년대 후반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버블이 꺼지면서 장기 침체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고용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는데, 1970년대 1.7%대에 불과했던 일본의 실업률이 최근까지 4% 중반대로 지속 상승한 것이다.

한국도 2012년부터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연평균 각각 1.7%, 0.9%에 불과한 수준으로, 경제성장 기여도는 모두 0.1%p에 그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근 3%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실업률이 지속 상승할 우려가 크다.

**(임금 하락 속 소득분배 악화)** 투자의 장기 부진이 임금 하락과 노동분배 악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본의 현금급여총액 기준 3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연평균 실질 임금 상승률은 1970년대 4.5%, 1980년대 1.3%, 1990년대 0.4%, 이후 2014년까지

-0.5%로 임금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민계정 상의 고용자보수 증가율도 1970년대는 16.5%로 높았으나, 1980년대 5.6%, 1990년대 1.9%로 빠르게 하락, 이후 2014년까지는 -0.4%로 마이너스 전환되었다.

한국도 일본과 동일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실질임금 상승률은 30인 이상 사업체 기준 2% 중반대, 5인 이상 사업체도 2%대 초반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국민계정 상의 고용자보수 증가율도 1990년대까지 두 자리 수를 유지했으나 2000년부터는 약 7.1%로 하락했다.

**(경상수지 흑자 속 재정 악화)** 한편, 일본은 구조적인 경상수지 흑자 속에서도 내수 부진으로 재정수지가 악화,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이 크게 둔화되었다. 일본은 1981년부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 2014년까지 연평균 11.7조 엔, 명목 GDP의 2.5%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세입-세출은 1970~1989년까지 연평균 13.3조 엔 수준에서 1990~2014년까지 동 -35.7조 엔 수준으로 2.7배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부채도 1980년 52.4% 수준에서 2014년에는 246.4%로 급상승하였다.

한국도 경상수지는 1998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둔화되면서 국가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35%를 상회하는 등 향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경우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부채 급증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심리 악화 속 인구 오너스 시작)** 이처럼 일본은 투자와 소비 부진의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소비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됨과 동시에 소비자물가도 장기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하면서 구조적인 소비 위축 현상은 더욱 확대되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5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후 2014년까지 총 10차례의 마이너스 증가세를 포함하여 연평균 0.1%에 그쳤다. 더욱이 1995년부터는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 장기 소비 침체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초반대로 하락한 것은 물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칫 소비의 장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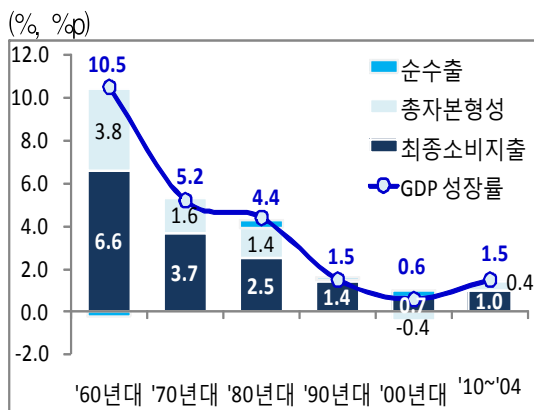
## ■ 시사점

중장기적인 소비 부진에 따른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력 지속 약화를 방지하기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 주체의 심리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 금융·통화 정책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문제 심화 등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조기 경기 회복세 강화는 물론 중장기 재정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 **둘째**, 국내 투자 유인 강화를 통해 투자의 해외 유출 가속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고용과 소득 증대를 통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 환율 안정화 대책 추진, R&D 세제 확충 및 법인세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국내 제조 기반 유지 및 확대, 덩어리 규제 및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의 구조적 부진 현상을 예방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등 공급측면에서의 노력과 신시장 창출과 같은 수요측 노력도 필요하다.

## 1. 국내 소비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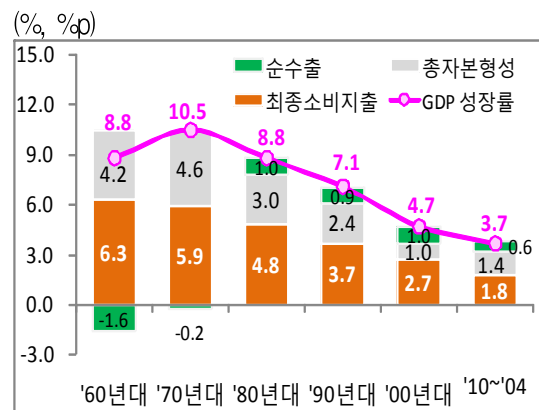
- 최근 한국 경제는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일본이 경험한 바와 같이 구조적인 소비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의 하락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일본, 중장기적으로 소비(최종소비지출)의 성장기여도가 지속 하락
    -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1960년대 6.6%p에서 1970년대 3.7%p로 약 56%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1980년대 2%p대, 1990년대 1%p대로 하락한 후 2000년대는 0%대로 지속 악화
    - 한편, 2010~2014년에는 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0%p로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와 더불어 아베노믹스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
  - 한국도 소비(최종소비지출)의 성장기여도가 지속 하락 추세
    -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1960년대 6.3%p에서 1990년대에는 3.7%p로 하락, 최근에는 1.8%p까지 하락
- 최근 한국도 일본처럼 통화 가치 상승,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 창출력 약화, 노동소득분배율 악화, 디플레이 심리 확산, 고령화 등으로 소비의 구조적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일본의 경제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



자료 : 일본 내각부, 국민경제계산으로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주 : 재고 등의 성장 기여도 제외.

< 한국의 경제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ECOS로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주 : 재고 등의 성장 기여도 제외.

## 2. 한일 비교

### ① 통화 가치 상승 속 해외직접투자 가속

○ 일본은 197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해외직접투자가 198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통화가치 평가절상을 계기로 가속화, 산업공동화 우려 유발

#### - 플라자합의(1985년) 이후 통화가치의 평가절상

- 엔/달러 환율은 1970까지 달러 당 360엔의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다 1971년부터 변동환율제로 이행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까지 여전히 저평가
-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엔화의 통화가치는 급상승하였는데, 1985년 238.05엔/달러에서 1986년 168.03엔/달러로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실질실효환율도 100을 넘어 1990년을 제외하면 2004년까지 100엔/달러대를 유지

#### - 통화가치의 평가절상과 더불어 해외직접투자도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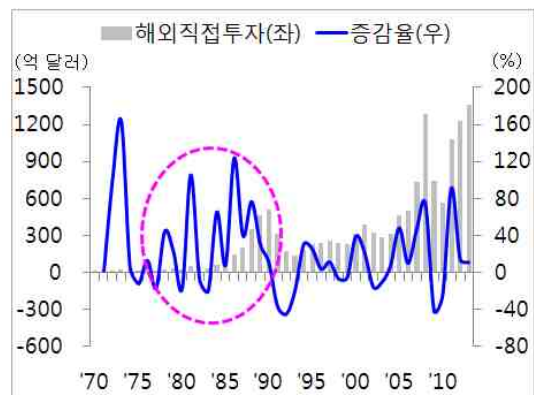
- 해외직접투자는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후 플라자합의까지(1971~1985년) 연평균 31.8%씩 빠르게 증가, 플라자합의 이후부터 버블붕괴 이전까지(1986~1989년)는 67.5%씩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가속
- 해외직접투자 규모도 동기간 누적 연평균 약 435억 달러에서 동 약 1,162억 달러로 약 2.7배 증가
- 버블붕괴가 시작된 1990년에도 508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2013년까지 연평균 503억 달러정도 수준을 유지

< 엔화 환율 추이 >



자료 : 일본 내각부, 일본은행.  
주 : 플라자합의는 엔고를, 역플라자합의는 엔저 유도를 위한 G7합의를 말함.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



자료 : UN comtrade.

○ 한국도 최근 통화가지가 절상되면서, 투자의 해외 유출 심화가 우려되고 있는 등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가능성이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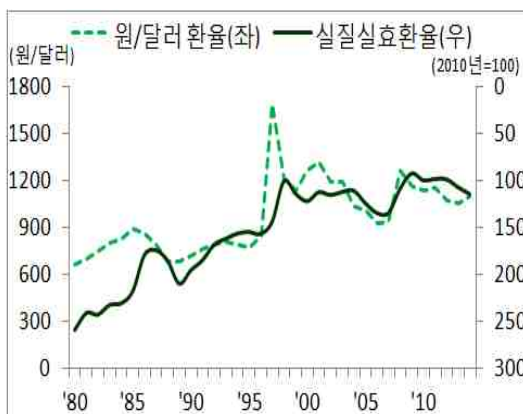
- 1980년대 이후 원화 환율은 최근까지 3차례 강세기<sup>1)</sup>를 경험

- 첫 번째 강세기는 1980년대 중반(1986~1989년)으로 1985년 890.2원/달러에서 1989년 679.6원/달러로 3년 간 약 27% 절상되었으며, 실질실효환율도 1987년 174.4에서 1989년 209.9로 상승
- 두 번째 강세기는 2000년대 중반(2004~2006년)으로 2003년 1,192.6원/달러에서 2006년 929.8원/달러로 약 22.0% 하락, 실질실효환율도 2004년 110.9에서 2007년 134.6으로 오름
- 세 번째 강세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급등락을 제외한 최근인 2012~2014년까지로 원/달러 환율은 2011년 1,151.8원/달러에서 2014년 1,099.3원으로 4.6%밖에 상승하지 않았으나, 실질실효환율은 동기간 98.5에서 114.7로 약 16.4% 상승

-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급증, 최근에는 조정 국면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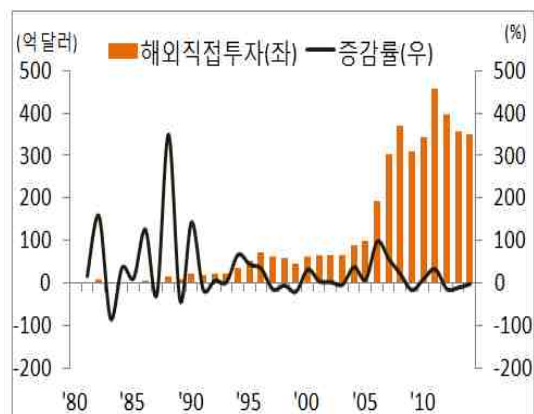
- 첫 번째 강세기는 비록 증가세는 평균 102.3%로 높았으나, 규모는 총 34.9억 달러에 불과했음
- 두 번째 강세기에 들어서서는 규모가 급격히 확대, 2007년 304.2억 달러로 연간 300억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최근까지 연평균 360억 달러 이상 수준을 기록

< 원화 환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BIS.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1) 본고에서는 단기 등락을 포함한 추세적인 원화 강세를 말함. 2014년의 경우, 전년 1,055.4원/달러 대비 상승했지만 실질실효환율은 2013년 107.4보다 오히려 상승하였음.

② 국내 투자 둔화 속 고용 부진

○ 일본의 설비 및 주택 투자는 엔고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버블이 붕괴되면서 투자 급감은 물론 장기 고용 부진을 유발

- 설비투자는 1970년대 초반부터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부진, 이후 1990년 버블붕괴 전 저금리를 배경으로 회복세를 보이다 버블붕괴 후 급감

· 설비투자는 1971년 마이너스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1977년까지 연평균 약 0.5% 수준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

· 이후 1973년 12월 9%였던 기준할인율이 1978년 3월 3.5%까지 낮아지면서 이듬해인 1979년부터 1991년까지 확장, 연평균 약 8.4% 높은 증가세 기록한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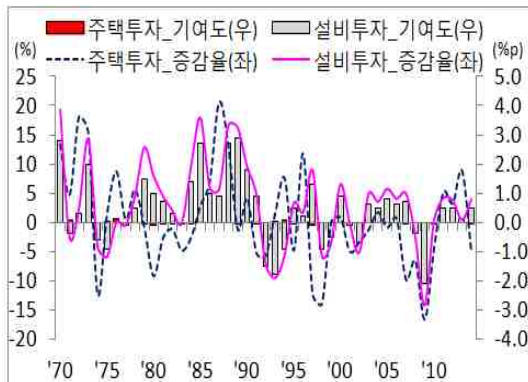
- 주택투자는 1970년대 후반부터 부진, 이후 금리 인하로 버블을 형성한 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급감

· 1979~1984년 주택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약 -3.6%, 이후 금리 인하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1987년 2월부터 1990년 8월까지 2.5%에서 6.0%로 기준할인율이 급상승하면서 악화

- 고용환경은 1980년대 중반 버블 형성기를 제외하고는 추세적으로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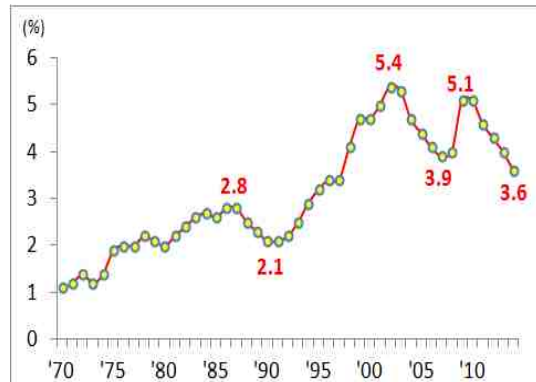
· 일본의 실업률은 연평균으로 1970년대 1.7%, 1980년대 2.5%, 1990년대 3.1%, 2000년대 이후 4.5%대로 지속 상승

< 일본의 민간투자 기여도 및 증감률 추이 >



자료 : 일본 내각부.

< 일본의 실업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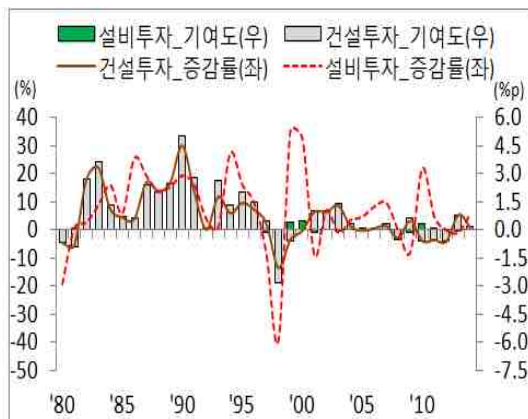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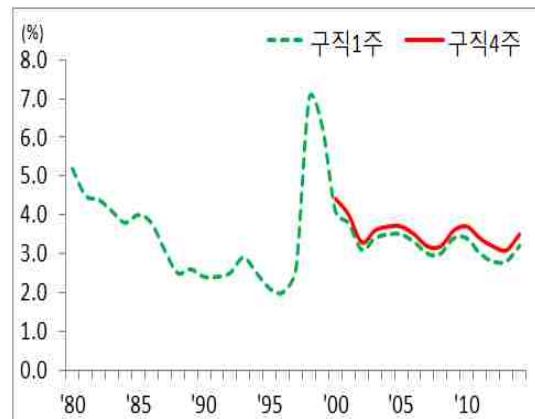
- 한국의 설비투자과 건설투자 증가세가 최근 들어 약화되면서 향후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설비투자과 건설투자 모두 원화 강세기와 둔화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나, 최근 들어 매우 부진한 모습으로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
    - 국내 설비투자 1980년 이후 외환위기(1998년), IT 버블붕괴(2001년), 카드대란(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과 같은 국내외 경제위기 전후로 높은 부침을 나타냄
    - 한편, 세 번째 원화 강세기인 2012년부터는 설비투자과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연평균 각각 1.7%, 0.9%에 불과한 수준이며, 경제성장 기여도도 모두 0.1%p에 불과하여 매우 약한 수준
  - 국내 실업률의 경우, 설비 및 건설투자 추이와 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향후 국내 투자 회복세가 미약할 경우 고용환경의 전반적인 악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국내 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 전인 1996년 2.0%까지 하락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3%대 수준에서 등락
    - 2012년과 2013년에는 2.8%까지 하락하였으나, 2014년에는 3.2%로 재상승하여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설비·건설 투자 기여도 및 증감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한국의 실업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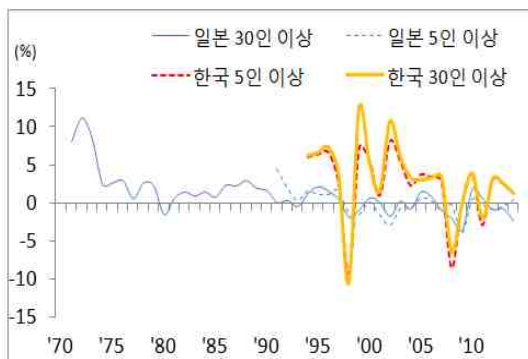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③ 임금 하락 속 소득분배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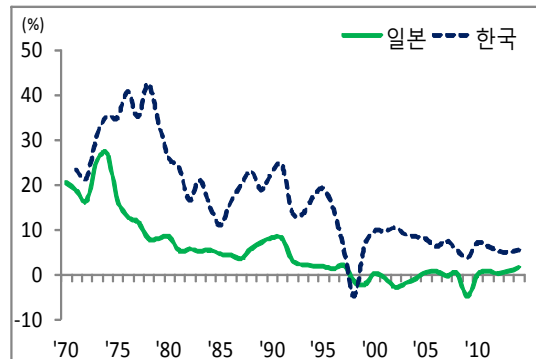
- 일본의 실질임금과 고용자보수 상승률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추세적 하락
  - 실질임금 상승률은 1970년대 초반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
    - 3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1970년대(1971~1979년) 4.5%, 1980년대 1.3%, 1990년대 0.4%로 하락,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0.5%
    - 5인 이상 사업체도 1990년대(1991~1999년) 1.0%, 2000년부터는 -0.7%로 하락
  - 고용자보수 증감률도 실질임금 추세와 유사
    - 고용자보수 증감률은 1970년대 16.5%, 1980년대 5.6%, 1990년대 1.9%로 하락,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0.4%로 마이너스 전환
-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실질임금 상승률은 1970년대 초반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
    - 3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1994~1997년 6.0%에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2.6%로, 5인 이상 사업체도 동기간 5.4%에서 2.1%로 급락
  - 피용자보수 증감률도 실질임금 추세와 유사
    - 피용자보수 증감률은 1970년대(1971~1979년) 33.2%, 1980년대 19.2%, 1990년대 13.3%로 하락,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7.1%로 하락

< 한국과 일본의 실질임금 상승률 추이 >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한국 고용노동부로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주 : 1) 일본은 현금급여총액 기준임.  
 2) 한국은 임금총액. 단, '93~'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따라서, '99년 상승률은 5인 이상과 10인 이상 대비로 시계열 표시를 위한 것임.

< 한국과 일본의 고(피)용자보수 증감률 추이 >



자료 : 일본 내각부, 국민경제계산. 한국은행.  
 주 : 명목 기준으로 일본은 고용자보수, 한국은 피용자보수.

④ 경상수지 흑자 속 재정 악화

○ 일본의 경우,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구조가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도 급격히 악화

- 일본의 경상수지는 1981년부터 흑자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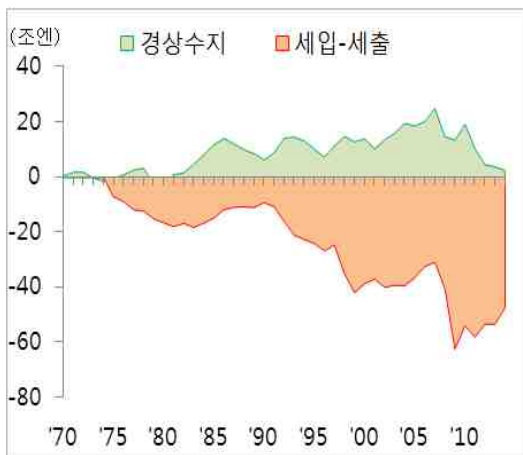
· 일본의 경상수지는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1.7조 엔, 명목 GDP 대비 2.5% 정도 수준의 흑자를 유지

- 일본의 세입-세출 구조는 버블 절정기에 소폭 개선되었으나, 버블붕괴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도 악화

· 1970년부터 버블붕괴 전인 1989년까지 일본의 세입-세출 규모는 연평균 -13.3조 엔 수준이었으나, 버블붕괴 이후 2014년까지 연평균 -35.7조 엔 수준으로 2.7배 증가

· 이처럼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도 지속 상승하여 1980년 52.4%에서 1996년 102.3%, 2009년 210.2%, 2014년 246.4%로 급상승<sup>2)</sup>

< 일본의 경상수지 및 세입출 차 추이 > <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추이 >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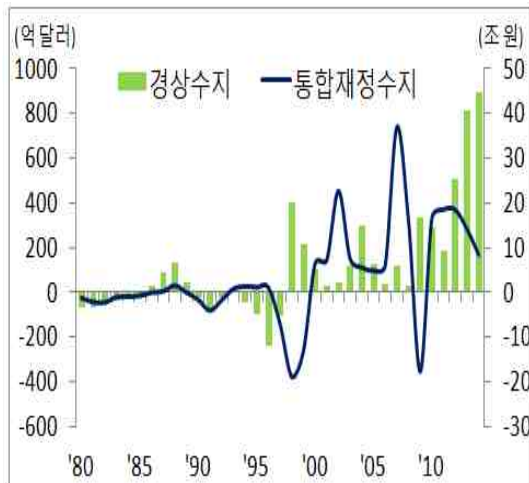


자료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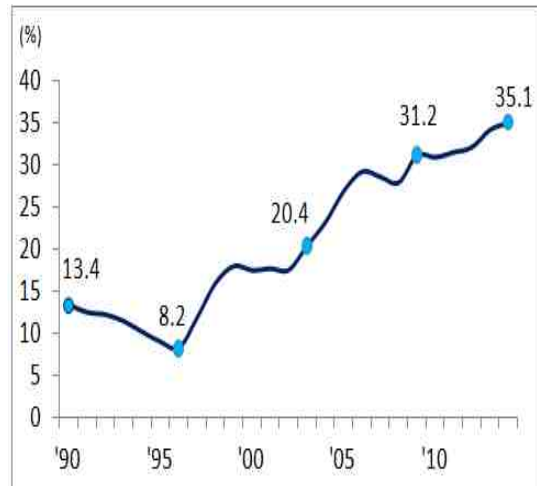
2) 1992년 8월부터 2013년까지 일본은 연평균 16.9조엔의 추경(총사업비 기준)을 투입, 총액으로는 404.7조 엔 규모에 이릅니다. 이상 일본 내각부.

- 한국도 외환위기 이후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최근 들어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경상수지는 1998년부터 흑자세를 유지, 최근에는 규모가 크게 확대
    - 경상수지는 1980~1997년까지 누적 560.9억 달러 적자에서,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흑자로 전환되면서 연평균 267.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국가부채도 급증
    - 반면 1980년대 이후 통합재정수지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외에는 흑자 구조를 유지했으나, 최근에는 흑자 규모가 크게 둔화
    - 통합재정수지의 악화와 더불어 국가부채도 급증하였는데, 외환위기 이전 11.9%였던 국가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2003년에는 20.4%, 2009년에는 31.2%로 빠르게 상승, 2014년에는 35.1%에 달함
    - 더욱이, 향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경우 재정수지 악화는 물론 국가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상존

< 한국의 경상수지 및 통합재정수지 추이 > <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주 : 1997년 이전은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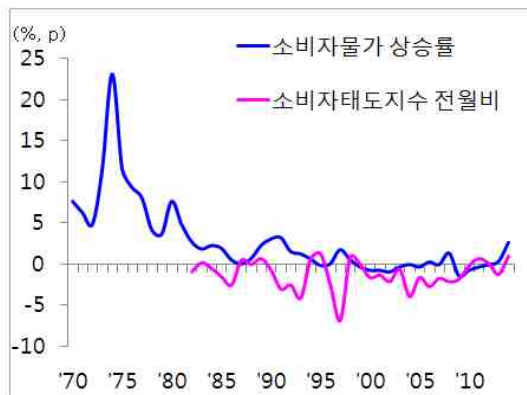
⑤ 소비자심리 악화 속 인구 오너스 시작

○ 1980년대 들어 소비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소비자물가도 장기 하락 세로 전환된 가운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하면서 구조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지속

- 소비자심리가 지속 악화되고 소비자물가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 심리 확산
  - 소비자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 전월비는 1980년대 초반 이미 마이너스로 하락 1982~2014년까지 33년간 평균 -1.3%를 기록
  -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980년대 초반부터 하락하면서 1988년에는 0.7%를 기록한 후 버블 확대와 함께 1990년대 초반까지 회복
  - 하지만, 1995년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2014년까지 총 10차례의 마이너스 증가를 포함하여 연평균 0.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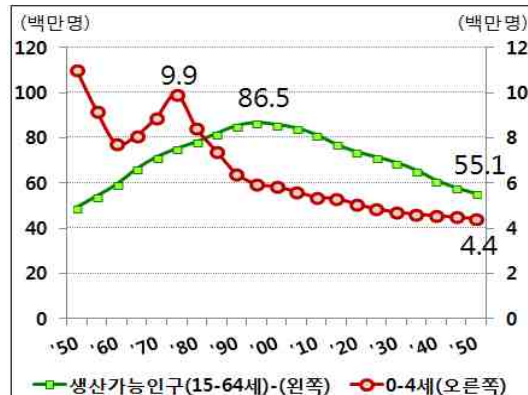
-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하면서 소비의 구조적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
  -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보너스가 종료,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
  - 출산기피 현상 확대로 0~4세아 규모도 1980년 약 1,000만 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약 500만 명 수준으로 하락

< 일본의 소비자심리 및 소비자물가 추이 >



자료 : 일본 내각부.  
주 : 소비자태도지수는 12월 기준 전월비.

<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및 0~4세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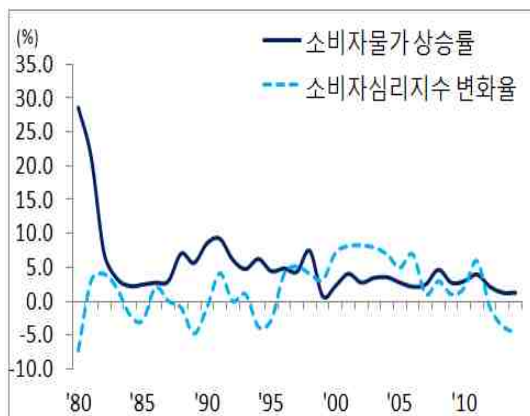


자료 : UN.

○ 한국도 최근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등 소비의 구조적 부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곧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하면서 부진한 소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

- 소비자심리가 지속 악화되면서 소비가 위축, 구조적 물가 하락 현상 발생
  - 국내 소비자심리지수 전년동기대비 연평균 변화율은 2011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후 2013년 3.2%로 회복되었으나, 2014년 2.5%로 다시 둔화되는 등 소비자심리가 악화
  - 국내 소비자물가는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연평균 7.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2014년까지 평균 2.7%로 낮아짐
  - 더욱이, 최근에는 2년 연속 1.3%로 1% 초반대에 머무는 등 소비자물가가 지속 둔화
- 한국도 2010년대 후반부터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 소비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 진입과 동시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전망
  - 한편, 한국도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0~4세아 인구 규모가 1980년 430만 명 수준에서 최근 약 2백 만명 수준으로 하락

< 한국의 소비자심리 및 소비자물가 추이 > <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및 0~4세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소비자심리지수 전년동기비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임.



자료 : UN.

### 3. 시사점

- 첫째,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 주체의 심리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을 완화해야 함
  -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내 유효수요를 창출, 경기 회복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 주체의 심리 악화를 예방
    - 금융·통화정책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 가계부채 문제 심화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상존
    -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 회복세 강화는 물론 재정의 추가적인 악화를 예방
  
- 둘째, 환율 안정화 대책 추진,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내 투자의 해외 유출 가속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고용과 소득 증대를 통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
  - 중장기적인 환율 안정화 대책 추진을 통해 환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의 해외 유출 가속화 현상을 방지
  - R&D 세제의 확충, 법인세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제조 기반 유지 및 확대 유인을 창출하는 것이 시급
  - 적극적이고 실효성 높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덩어리 규제 및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유도
  
-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의 구조적 부진 현상을 예방해야 함
  -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한편 여성인력의 활용도 제고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인구구조의 변화를 공급측면에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 창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경제연구본부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02-2072-6306, leebuh@hri.co.kr)